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경주지역 시민사회 공동대응 기자회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반대하라!

경주지역 시민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끓는 민의와 사태의 엄중함을 목도하면서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주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퇴근 홍보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행동의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6월 12일 핵 오염수 해양투기 시설의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해양투기가 초임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윤석열 정권은 6월 15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투기 하는 일본보다 해양생태계 파괴와 먹거리 안전을 우려하는 자국민의 여론을 업신여기면서 일본 정부 비호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권이 더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하루빨리 일본 내각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로 복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쉽 없이 이야기하는 과학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과학의 뿌리는 검증 가능성입니다. 모든 과학자는 논문에서 자신의 연구 과정을 세밀하게 밝히고 동료 과학자에게 검증을 요청합니다. 동료 과학자의 반복된 연구에서 똑같은 결과가 생산될 때 논문은 과학의 권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추고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소위 '후쿠시마 비밀 관광단'도 핵 오염수 샘플 하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제공하는 자료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권의 과학 타령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즉각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믿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또한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100년 장기 보관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장기 보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장기 보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양을 반감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오염수 처리 방안을 더 연구해야 합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는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공동행동을 펼쳐나가면서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뜻있는 많은 단체와 시민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2023년 6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주시민행동'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일동